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약국에서 7일 이내에 1급 약물 회수를 환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

1급 회수 조치 대상 약물,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 또는 사망을 초래할 확률 높아

Cuomo: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약물이 실제로는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면 환자는 이 정보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바로 해당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자들이 회수 대상 약물에 대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FDA에서 발행한 1급 약물 회수 조치를 7일 이내 환자에게 알리도록 약국에 요구하는 법안(S.5091B/A.4781B)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1급 회수 조치 대상 약물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심각한 결과 또는 사망을 초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회수된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의 심각성은 노인 환자와 장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높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회수 조치 대상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약물이 실제로는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면 환자는 이 정보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바로 해당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자들이 회수 대상 약물에 대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약국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환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Leroy Comrie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FDA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처방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물에 대한 수천 건의 회수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의약품 유통하는 약국에서 중요한 처방약 회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릴 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주변 지역 수준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약 산업에서 이러한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Daniel Rosenthal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Daniel Rosenthal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국은 환자와 처방전 사이의 마지막 접촉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이 유해한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수많은 환자와 노인을 위한 의료 안전 대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을 보여 주신 Comrie 상원 의원님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